

# 근로빈곤층의<sup>1)</sup> 빈곤현황과 정책평가

*The Current State of the Working Poor and Policy Assessment*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한국경제가 국제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일차적으로 경제 전반의 기술기반을 고도화하고 경쟁환경을 개선하면서 효과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인적자원 정책으로서 생산요소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긴 하나, 주되게는 이미 발생한 근로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2차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근로빈곤층이 생성되고 확대되는 과정이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국의 복지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을 넘어서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근로빈곤층 관련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 속에서 일국의 정부가 이에 관해 할 수 있는 일과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문제의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한국경제가 국제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

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일차적으로 경제 전반의 기술기반을 고도화하고 경쟁환경을 개선하면서 효과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인적자원 정책으로서 생산요소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긴 하나, 주되게는 이미 발생한 근로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2차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로빈곤현상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세계시장의 경쟁구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다 전반적 경제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로빈곤 대책을 표방한 정책들의 효과를 이들로 부터 분리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통상적인

1) 근로빈곤이라는 용어는 근로능력 보유 가구원을 포함한 빈곤가구를 뜻하기도 하고, 과거 일정기간 동안 취업했던 가구원이 포함된 빈곤가구나 취업자 포함 빈곤 가구를 가리키기도 함. 여기서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인 근로능력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한 경우라는 의미로 사용했음. 즉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뿐만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넓은 범위의 빈곤가구임.

정책평가의 주관심인 성과(output or outcome)나 비용효과보다는 정책의 표적집단과 포괄범위, 개입논리, 전달체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 1.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근로빈곤의 심화

근로빈곤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저에서 빈곤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와 생산의 글로벌화, 숙련편향적(skill-biased) 기술발전 등의 변화들은 상호 긴밀하게 결합된 하나의 장기추세로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통상 공업화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의 서비스화가 뒤따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임금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한다. 이는 서비스업의 상당부분이 제조업과 달리 국제경쟁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난 비교역재로서 생산성이 낮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기술 발전과 결합하여 그 영향이 증폭된다. 즉, 자본시장 통합과 교역 증가, 정보기술 발전 속에 공급사슬(supply chain)이 글로벌화되면서 개별 제품이 닿을 수 있는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타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특수한 숙련의 부가가치는 증가

하는 반면, 표준화된 업무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더구나 글로벌화된 공급사슬 속에서 저개발 국가의 저숙련근로자들이 글로벌 경제 안에 포함되면서 저숙련노동의 희소가치가 급감했다. 중국과 인도, 동구권 경제가 글로벌경제에 일시에 편입된 1990년대 초반, 세계 경제의 노동력 규모는 14억 6천만명 수준에서 29억 3천만 수준으로 배가된 것으로 추정된다(Freeman, 2008). 결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유희노동력의 이동으로 각국의 서비스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서비스업 내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위치는 더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저임금일자리 증가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이것이 다시 근로유인의 저하를 초래해 미취업 빈곤, 또는 장기빈곤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우리나라는 특히 급격한 산업화와 중국의 영향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여 선진국에 비해 공업화와 서비스화에 소요된 시간이 극히 짧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에 따르면 불과 1992년 이후 불과 5년 동안 섬유·가죽·신발 등의 저기술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41.8% 감소했고, 숙박·음식서비스, 도·소매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생산성 영세업체에 집중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한 것은 저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2012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64.8%가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 중 26.3%인 462.2만명이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근무하며, 평균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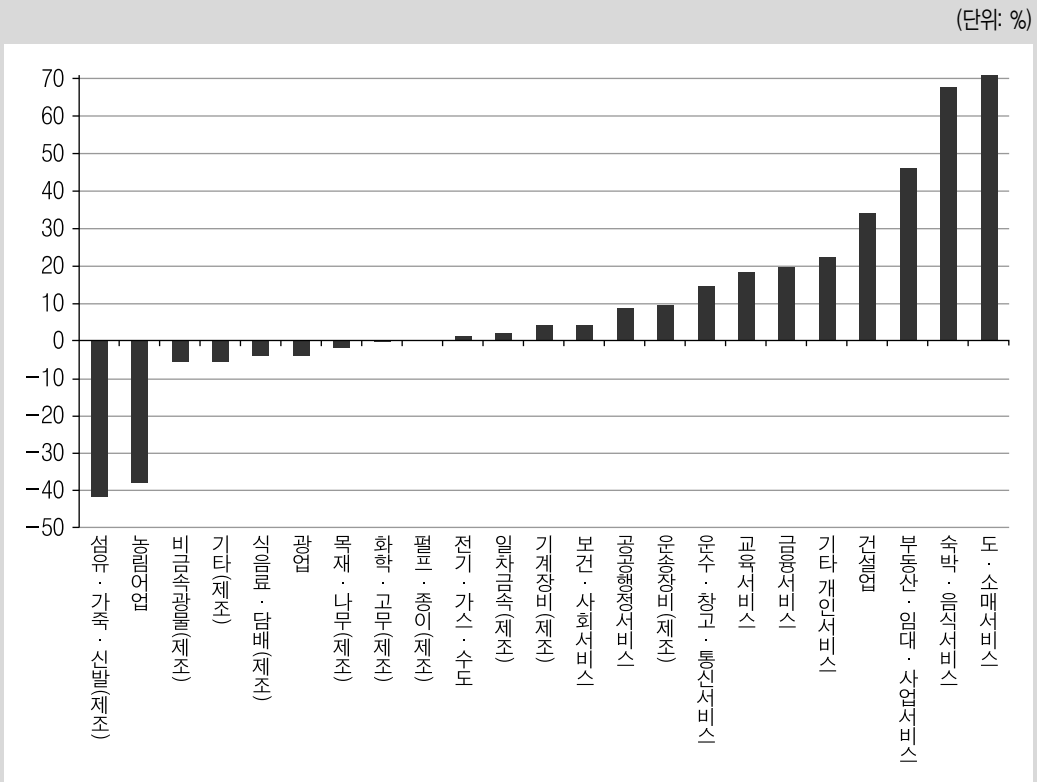
이 124.7만원, 5~9인 사업장이 164.3만원으로 300인 이상 352.6만원의 35.4%, 46.6%에 불과하다(그림 2).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저소득층의 상황이 악화되고, 단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속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근래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점유율의 추이는 저소득층으로 귀속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1).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1996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78%

감소했으며, 단독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개인 단위로 분석할 경우에도 하위 10%의 소득점유율은 동기간 59.5% 감소했다. 상위층이나 중위층에 비해 하위층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저소득층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는 취업자 빈곤율과 미취업자 가구 빈곤율의 심화에서도 드러난다. 취업자 빈곤율과 극빈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각각 8.1%, 1.3%에 이른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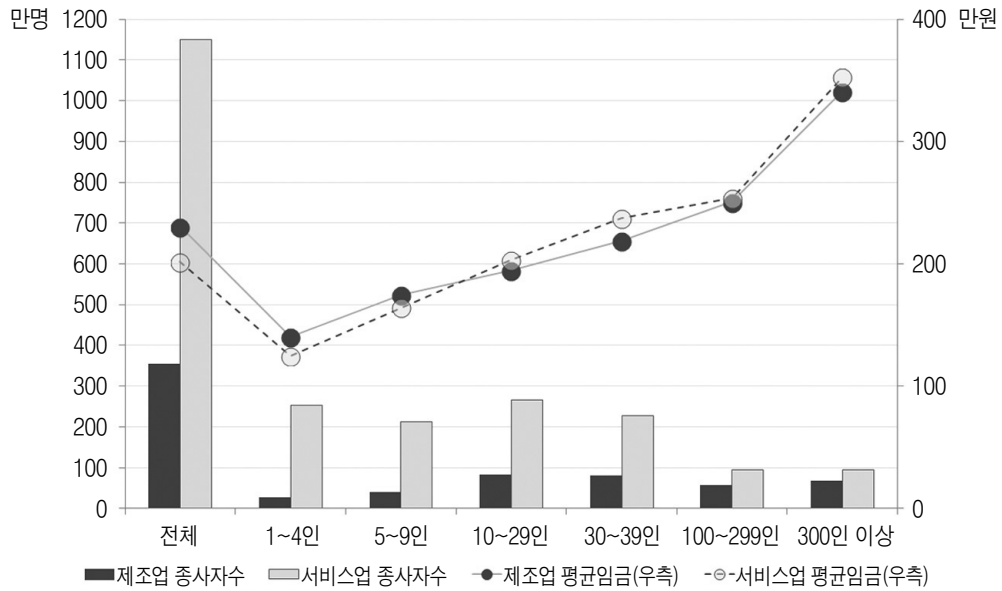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율(1992~1997년)



주: STAN database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23개 산업으로 분류  
 자료: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Statistics) database

그림 2. 제조·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및 평균임금

(단위: 만명, 만원)



주: 서비스업은 다음의 13개 산업(9차산업분류)으로 정의: 도소매(G), 숙박음식(I), 출판통신(J), 금융(K), 부동산임대(L), 사업(N), 전문과학(M), 교육(P), 보건사회복지(Q), 예술스포츠여가(R), 수리기타개인(S), 하수폐기(E), 운수(H).  
 자료: 통계청(2012.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표 1. 계층별 시장소득 점유율 추이

구분	가구기준					개인기준					
	1996년	2000년	2006년	2011년	변화율	1996년	2000년	2006년	2011년	변화율	
상위 10%	24.1	29.2	24.9	25.7	6.5	22.5	27.5	22.9	23.1	2.8	
5분위	5	39.5	44.9	41.8	42.9	8.7	37.2	42.2	38.4	38.9	4.5
	4	24.9	23.7	25.5	25.8	3.7	22.5	22.3	24.2	24.0	6.5
	3	16.4	16.4	17.8	18.1	10.3	17.8	16.8	18.2	18.4	3.2
	2	12.9	10.7	11.1	10.6	-18.3	13.9	12.3	13.1	13.3	-4.6
	1	6.3	4.4	3.7	2.6	-58.2	8.5	6.4	6.1	5.5	-36.0
하위 10%	2.0	1.2	0.9	0.4	-78.0	3.2	2.2	1.8	1.3	-59.5	

주: 1) 소득기준은 각각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개인화한 시장소득임.  
 2) 변화율은 1996년도 대비 2011년도의 수치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가계동향조사(2006, 2011)

표 2. 취업여부에 따른 빈곤율 추이

구분	1996년	2000년	2006년	2011년
취업자 빈곤율	5.7( 0.6)	7.9( 0.8)	7.6( 1.0)	8.1( 1.3)
취업자 있는 가구 빈곤율	6.5( 0.5)	9.3( 0.9)	8.4( 1.0)	8.5( 1.1)
취업자 없는 가구 빈곤율	47.9(16.0)	56.1(24.9)	62.0(26.9)	65.6(34.9)

주: 1) 소득은 균등화/개인화한 경상소득이며, 괄호안은 극빈율  
 2) 각 연도별로 중위소득 50%미만을 빈곤, 25%미만을 극빈으로 정의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가계동향조사(2006, 2011)

그런데 빈곤 현상 전반을 조망할 때 이 중 보다 우려되는 것은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취업자를 포함한 가구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미취업 기간의 증가를 시사한다. 취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낮아질 때 근로유인 자체가 저하되어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데, 1995년 이후 저학력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율은 8.7%에 이른다.<sup>2)</sup>

따라서 저소득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빈곤의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빈곤 탈출의 이동성이 약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2000~08년 기간 동안 장기적,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구주가 전체의 27.4%에 달하며, 이 중 55.9%가 미취업자인 것으로 분석된다.<sup>3)</sup>

## 2. 근로빈곤대책의 방향

미취업은 빈곤 진입과 지속, 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취업가구 빈곤은 일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지는 현상으로서, 그간 양자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경합적인 관계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능력자 포함 가구의 미취업빈곤과 취업빈곤은 모두 빈곤의 부분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적 대응이란 측면에서도 별도의 접근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는지가 실제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양자 모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취업 증진과 인적자원 지원으로 요약된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는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저임금근로자가 있음에도 빈곤한 가구에는 추가적인 소득창출자가 생기도록 증진하고,<sup>4)</sup> 저임

2) OECD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저학력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0.6% 감소, 저학력여성이 3.3% 증가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각 8.7%, 2.2% 감소했음.

3) 윤희숙(2012).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4) 근로빈곤현상을 '가구내 추가적 근로자가 필요한 현상'으로 인식하거나 '빈곤에 떨어질 정도로 1인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은 현상'

금 취업자는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숙련향상과 이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빈곤에 대한 각국의 대응 역시 고용증진과 직업능력 향상으로 요약되며,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인 공공부조를 고용지원과 연동시켜 재편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sup>5)</sup> 저임금으로 인해 취업동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소득보장에 치중한 기존 시스템이 현 상태에 안주할 유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빈곤상태를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대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확대되는 추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주요한 흐름이다. 이는 표준적 숙련을 가진 근로자와 그 가족이라는 범위에 대부분의 근로연령대 인구그룹이 포괄될 수 있었던 과거 제조업 중심 노동시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이 복지정책의 거버넌스와 공급체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생산체계에서 사회의 복지기능은 사업장 위주로 도입되어 사회보험 중심으로 정착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은 사회적 파트너로서 사회정책에 대해 교섭당사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 구조 속에서 복지제도는 근로자 중심으로 확립되었고, 빈곤의 예방과 대응 역시 근로자 중심의 복지체계가 담당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공공부조는 이 구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일부 인구그룹을 배려했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기미취업자와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표준적인 근로계약에서 벗어나는 비정형근로가 증가하는 구조변화는 기존 근로자 중심 복지체계에서 벗어나는 빈곤그룹의 규모가 확대되어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사회정책이 고용관계를 매개로 한 근로자 중심 체계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고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할 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우리나라 근로빈곤대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에서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개인과 전체 경제가 낙후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지만,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각국의 제도 개선이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시스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고용지원이나 근로장려제 등에서 보듯이 취업자가 없거나 적은 가구의 보다 많은 가구원을 일자리와 연결시키고, 저임금을 보조

으로 인식할지에는 규범적 판단이 동반됨. 그러나 근로유인 제고 목적이나 소득보조 목적 모두 근로시 임금이나 소득을 보조해야 할 필요성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 상의 큰 차이가 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을 보조하는 정책 대안의 경우에는 이들 대안과 관점의 차이를 가지나, 이들 대안 모두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5) Immervoll, Herwig and Mark Pearson(2009). A Good Time for Making Work Pay? Taking Stock of In-work Benefits and Related Measures Across the OEC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1.

하여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빈곤 대책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올라 상향이동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지원시스템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 때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여부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경기적 영향, 거시정책의 적절성 등에 의해 1차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 이들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반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정책들 역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정책 역시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로빈곤 정책을 평가해보면, 우선 정책의 대상을 극빈층으로 설정하여 정책의 포괄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구조조정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자나 한계적 근로자가 증가하여 빈곤이 장기화·만성화되는 경향 속에서도 막상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노동시장 내에서 상향이동할 기회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소득보장 수준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훈련지원을 포함한 복지의 내용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희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주어지고 있을 뿐, 직업능력이 취약한 인구 그룹의 직업훈련 기회에는 있어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층만 해도 규모가 약 500만명에 달하

는 것으로 추산되나(김문길 외, 201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2010년 145만 8천명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소득지원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와 일자리 매칭을 보조하거나, 직업능력을 키워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은 미비 상태이다.

인적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능력자 수급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취업자의 직업능력을 제고하여 이동을 지원하는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들은 근로소득 유무나 규모를 과소보고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공식 부문 일자리에 머물거나 근로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잃지 않도록 저소득에 머무는 성향을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복지지원이 정반대의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제도 내·외부로부터의 혜택 역시 스스로 능력을 향상하여 노동시장에서 자립하기보다 수급자격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동한다. 보장소득의 수준이 저임금 일자리 임금수준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각종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수급자격과 연동된 혜택이 크며, 이 중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지원 등은 저소득 수급자의 근로소득 증가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거나 이동성을 제한하는 혜택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빈곤층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노동패널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머물고 있는 가구주의

직업훈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항상적으로 빈곤에 머문 65세 미만 가구주 중 조사 기간(2000~2008년) 중 한번도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98%에, 반복적·장기적 빈곤에 머무른 가구주(3회 이상 빈곤경험) 중의 비율은 86.2%에 이르렀다.<sup>6)</sup>

그러나 이에 관한 예산 투입이 크게 확대되어 2012년에는 약 9조 5,3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사업설계나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회성 단기사업에 그치는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중이 높고, 직업훈련은 대기업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다수 저소득층 근로자는 직업훈련체계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다 넓게는 이러한 훈련 시스템이 복지지원 전달체계와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빈곤대책의 핵심인 동시에 일반근로자 역시 쉽게 기댈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요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단계 근로빈곤대책, 나아가 복지정책의 초점으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최상위목표로 설정한 후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을 그 부분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자 누구나 실직이나 저숙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완비하고, 이들 중 빈곤층에게는

소득보장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 소득보장에 치중했던 복지시스템은 (근로능력자에 관한 한) 저소득층 소득보장시스템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으로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대폭 정비·확대하면서 복지전달망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의 일부로 공공부조 제도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 설정하고 근로능력 빈곤층의 공공부조 기능을 별도의 제도로 분리시켜 전반적 노동시장 정책 내부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 지원 대상은 크게 넓히되,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찾기와 직업능력 향상에 현금지원을 연동하는 적극적 복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덧붙여 ‘고용을 통한 복지’를 위한 노력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들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률 제고 노력이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서구국가들의 관찰은 고용률 제고만으로 근로빈곤대책이 해소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각종 사회적 위험에 더 노출되는 반면 복지혜택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제약되기 쉽고, 보육서비스 등의 재정지원으로 맞벌이가 증가할 경우 기존의 소득분배 불균등성을 악화시키기 쉽기 때문이다.<sup>7)</sup> 이러한 점은 전반

6) 윤희숙(2012).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7) Marx, Ive et al.(2012). Can Higher Employment Levels Bring Down Relative Income Poverty in the EU? Regression-based Simulations of the Europe 2020 Targe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5), pp.472~486.; Pintelon, Olivier et al.(2013).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Social Risks: The Relevance of Class for Social



적 고용률 제고에 힘쓰되,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외의 종합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유인 제고와 저임금근로자 지원을 위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근로조건부 급여가 그 자체로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sup>8)</sup>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는 이상 근로장려세제 등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역시 제도의 취지가 좋다는 점에 의존해 확대를 반복하기보다는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제도 실효를 보완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문  
지

---

Investment Strateg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1), pp.52~67.

8) Huttunen, Kristiina et al.(2013). The Employment Effects of Low-wage Subsid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7, pp.49~60.